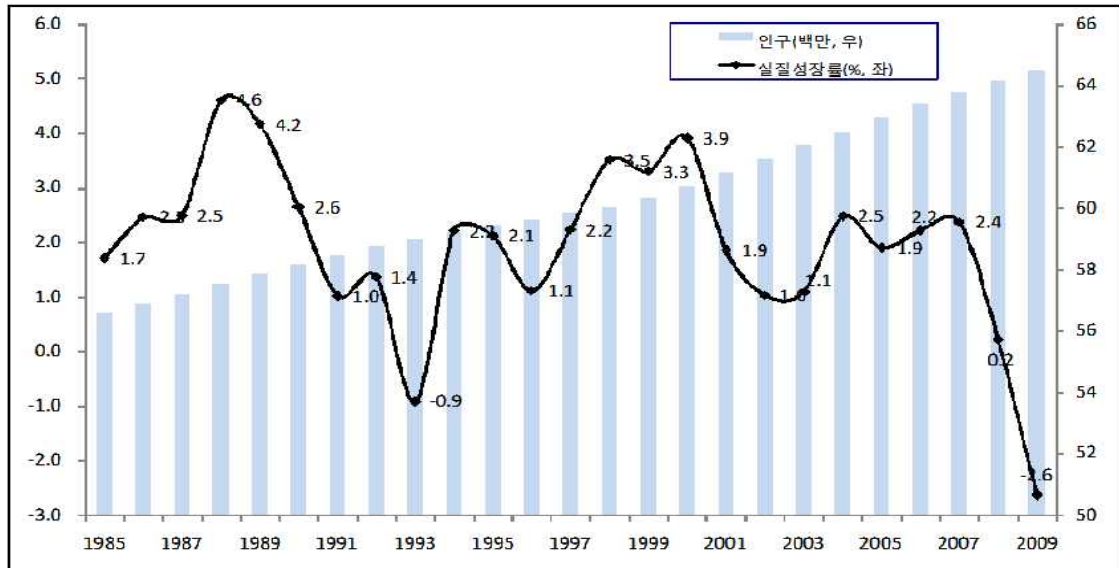


## 프랑스

- FY2012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 2012년 예산법안(LF 2012: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2)은 2011년 9월 28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8일 예산법(LF 2012: Loi de finance)으로 통과
  
- 출처
  - 2012년 예산법안 (LF 2012: Loi n° 2011-1657 de finances pour 2012 )
  - 2012년 예산안 관련 언론공개 자료 (프랑스 정부 발표)
    - Les grandes lignes, Les chiffres clés 등
  - 2011-2014 중장기 예산법안 (LPPF 2011 a 2014: Loi n° 2011-1645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11 a 2014)
  - 201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LFSS 2012: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Les chiffres clés 등
  
- 환율 : 1유로 = 약 1,541.42원 (2011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0년 경상GDP 2조 2,144억 달러(우리나라 2.2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10년 기준 53.3%(우리나라 102.0%)
  
- 인구 : 6,484만명(2010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2012년에 경제성장 전망률은 1%→0.5%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뚜렷한 둔화세를 보임
  - 2011년에는 연초 2.0%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1.6% 그침
- 채무비율은 경기침체, 높은 재정적자와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나, 2016년까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으로 88%를 전망
-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A→AA+'로 한 단계 강등

◇ 예산기조 : 재정적자 감축 및 균형재정 달성

- 2012년 예산법안(LF 2012)은 긴축예산을 통해 지난해 GDP 대비 6.1%였던 재정적자를 올해 GDP대비 4.5%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재정적자를 2013년에 안정 및 성장협약(SGP) 기준인 3%로 줄이고 2016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2년 세입은 2,888억 유로로 201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세출) 2011년 수정전망 대비 1.1% 증가한 3,660억 유로로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

◇ 주요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2012년부터 실행되는 174억유로 규모의 세제혜택 축소
  - 채무와 연금에 관련된 지출을 제외한 지출 안정으로 연평균 0.6%의 지출 증가율을 전망
- (사회보장) 80억유로의 새로운 재원마련과 의료비 등의 지출 통제 계획
  - 200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를 2012년 179억유로까지 감소시킬 계획

###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1년 1월 6-7일	<input type="checkbox"/> Colloque Nouveau monde, nouveau Capitalisme 포럼 개최	재정동향 5호 참조
2011년 1월 31일	<input type="checkbox"/> 프랑스에 대한 경제검토위원회(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EDRC) 개최	
2011년 5월 11일 발표 7월 8일 의회 통과	<input type="checkbox"/> 2011 예산수정안 발표 및 의회 통과	재정동향 6호 참조
2011년 5월 25일	<input type="checkbox"/> 2011년 사회보장 수정예산법 발표	
2011년 8월 8일	<input type="checkbox"/> 제2차 수정예산안 발표	재정동향 7호 참조
2011년 8월 12일	<input type="checkbox"/>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주식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2011년 8월 16일	<input type="checkbox"/>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 유로존 회원국들의 단일경제정부 역할을 할 공동경제위원회 설립안 공식 제안 - 2013년부터 적용할 공동법인세 추진협의 - 금융거래세 신설을 추진	
2011년 8월 24일	<input type="checkbox"/> 프랑스 정부 재정긴축 계획 발표	
2011년 9월 6일	<input type="checkbox"/> 제2차 수정예산안 의회 통과	
2011년 9월 23일 제출 12월 28일 채택	<input type="checkbox"/> 201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LFSS 2012: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11년 9월 28일 12월 28일 채택	<input type="checkbox"/> 2012년 예산법안(LF 2012)	
2011년 10월 9일	<input type="checkbox"/>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 유로존 모든 국가 EFSF 확대안 승인	
2011년 11월 7일	<input type="checkbox"/> 프랑스 정부 2차 재정긴축 계획 발표	재정동향 8호 참조
2011년 12월 9일	<input type="checkbox"/> EU 27개국 중 영국을 제외한 26개 회원국 정상들이 재정 통합을 강화하는 '신 재정협약'에 합의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시 경기부양책<sup>15)</sup> 실시로 GDP대비 재정적자가 큰 폭 증가 ('07년 2.8%→'10년 7.1%)
  -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A→AA+' 로 한 단계 강등('12.1.13 금요일)
  - 이러한 재정악화는 주로 정부지출의 증가에 기인(OECD, '11.11월)
    - 프랑스의 GDP대비 정부지출 규모는 '10년 56.7%로 매우 높은 수준('10년 OECD평균 44.6%)이며,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은 '07년 28.4%로 GIIPS국가들<sup>16)</sup>보다 높은 수준

<표 IV-1>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단위: GDP대비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재정수지	△3.0	△2.4	△2.8	△3.3	△7.6	△7.1	△6.1	△4.5	△3.0	△2.0	△1.0
국가채무	66.7	64	64.2	68.2	79	83.6	86.4	87	86.8	85.3	83.2

출처: INSEE(경제 및 통계연구기관) 및 예산청 자료 참조해서 작성, 2008년까지 자료는 INSEE 자료, 2009년 이후 자료는 예산안(PLF 2012) 자료임

-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는 각각 1.5%와 1.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서서히 회복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11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의 정체와 유럽 전역의 경기 침체를 반영해 2012년 1%→0.5%로 하향 조정함

15) 경기부양책은 '09년 383억 유로, '10년 96억 유로규모

16) '07년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 (그리스) 21.3 (포르투갈) 22.5 (아일랜드) 16.3 (스페인) 21.6 (이탈리아) 24.9 (OECD 평균) 19.3

<표 IV-2>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

	2009	2010	2011	2012
프랑스GDP	-2.6	1.5	1.6	1→0.5
가정소비	0.6	1.3	1.7	1.7
기업투자	-8	2.0	5.5	4.9
수출	-12.4	9.4	7.6	5
수입	-10.7	7.1	6.7	5.4
소비자물가지수(연평균)	0.1	1.8	2.1	1.9

자료: PLF 2012, Ministère de l'Economie, de l'Industrie et de l'Emploi 취합 (Agence France Trésor)

- (소비) 소비는 경기부양 정책과 사회복지 혜택으로 인해 경제위기 기간동안 감소하지 않았으나 2012년 1, 2차 재정적자 감축안(8.24일, 11.7일)의 소득세율 및 소비세율 인상 조치 등과 GDP전망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50만 유로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1% → 44%로 인상
  - 담배, 주류, 청량음료, 테마파크 티켓 등 소비세율 인상
- (기업투자환경) 2012년 세금인상과 세제혜택 축소 등 재정적자 감축 방안으로 기업투자 환경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세율인상: 연매출 2.5억 유로 이상 기업 법인세 5%p 한시적 인상(34.4%→39.4%)
  - 세제혜택축소: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 (무역) 수출은 2011년 약 7.6%까지 증가하였으나 2012년 수출증가율은 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무역 상승률은 2011년 0.3%, 2012년 0.1%로 전망
- (물가상승) 유가 급등으로 2010년 1.8%에서 2011년 2.1%로 상승, 2012년 1.9%정도로 전망(공공요금 및 변동이 심한 상품을 제외한 기저물가 상승률은 0.7%)
  - 공산물 물가는 0.2% 하락하여 물가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서비스 물가 1.4% 인상(교통비를 제외한 공공요금 인상)
- 담배 가격은 정부의 지속 인상정책으로 5.6% 인상
- 에너지 물가는 석유제품의 가격 급등으로 12.5% 상승하여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작용
- 식료품 물가는 신선한 농산물 가격의 9.4% 인상으로 1.2% 상승
- (고용 및 실업) 실업률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2%p가 높아진 9.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 통계청(INSEE) 9월 1일 발표에 의하면, 2011 2/4분기 실업률은 9.6%로 전분기에 비해 0.1%p 감소
  - 남자 실업인구 증가율은 전년대비 0.3%p(9.4%→9.1%)감소하였으나 여자 실업인구 증가율은 0.1%p(10.2%→10.3%)증가, 50세 이상의 실업인구 증가율은 전년대비 13.0%로 가장 높음
  - 해외속령을 제외한 본토 실업률은 전분기 9.3%에서 9.1%로 0.2%p 감소

## 나. 재정전망

### 1) 프랑스정부 세입 및 세출전망

- (지출) 2011년 수정예산 기준으로 3,619억유로, 2012년(확정예산)에는 이보다 1.1%정도 증가한 3,660억유로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3,726억유로, 2014년에는 3,791억유로로 지출 할 것으로 전망
- (수입) 조세수입은 2011년 2,700억유로, 2012년에는 2.1% 증가한 2,756억유로로 전망하고, 세외수입은 2011년 56억유로, 2012년은 이보다 135.7% 높은 132억유로로 전망
  - 2014년까지 조세수입은 증가추세 보이며 2012년 대비 12.6%정도 증가한 3,104억유로로 전망
  - 2012년에 증가세를 보이던 세외수입은 201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며 236억유로(2012년 대비 78.8%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IV-3> 프랑스 2010-2014년 재정 전망

(단위: 백만유로)

	2010	2011	2011 수정	2012	2012 확정예산	2013	2014
지출	4,242	3,598	3,619	3,662	3,660	3,726	3,791
수입	2,733	2,713	2,756	2,931	2,888	3,175	3,340
조세세입	2,547	2,544	2,700	2,737	2,756	2,950	3,104
세외수입	186	169	56	194	132	225	236
재정수지	1,509	885	919	731	772	551	451

2) 프랑스정부 재정수지

- 프랑스 중기재정 예산법안 2011-2014에 따르면, GDP 대비 세출은 감소하고 세입은 증가하여, 2010년 7.7%이던 재정적자가 2014년 2.0%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예산법(LF 2012)에서는 2010년 재정적자를 7.1%로 수정 (2. 예산기조 참고)

<표 IV-4> 프랑스 2011-2014년 GDP대비 재정수지 전망

(단위: 10억유로)

	2010	2011	2012	2013	2014
GDP대비 세출	24.6	22.1	21.1	20.0	19.1
GDP대비 세입	16.9	16.1	16.5	17	17.1
GDP대비 재정수지	-7.7	-6.0	-4.6	-3.0	-2.0
재정수지	-150.9	-88.5	-73.1	-55.1	-45.1

자료: LPFP 2011-2014(2010.9)

### 3) 프랑스정부 부채비율

- 채무비율은 경기침체, 높은 재정적자와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
  - 2012년에는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힘입어 GDP대비 실질재정수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중기재정예산법안(LPFP) 2011-2014: 2011년 6.0% → 2012년 4.6%
    - 2012년 예산법안(PLF 2012): 2011년 6.1% → 2012년 4.5%
  - 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으로 국가부채가 2012년에는 87.4%에 이르며 2013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을 두고 있음

<표 IV-5> 프랑스 2009-2014년 부채비율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부채율*						
*마스트리히트 기준	78.1	82.9	86.2	87.4	86.8	85.3
실질재정수지	-7.5	-7.7	-6	-4.6	-3	-2

주: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자료: LPFP 2011-2014(2010.9)

## 2. 예산기조

- 2012년 예산(LF 2012)은 재정적자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긴축예산을 통해 2010년 GDP 대비 7.1%였던 재정적자를 2012년 GDP대비 4.5%를 목표로 감축
  - 이후 2013년 안정 및 성장협약(SGP) 기준인 3%로 줄이고 2016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GDP대비 %)

(‘10) 7.1→(‘11) 6.1 →(‘12) 4.5 →(‘13) 3.0 →(‘14) 2.0→ (‘15) 1.0 →(‘16) 0

- 지출감축 : 2011년 수정전망 대비 1.1% 증가한 3,660억 유로로 인플레이션 상승률<sup>17)</sup> 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
  - 정부 채무와 연금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정부지출 삭감 (2010년 GDP대비 24.6%→2012년 GDP대비 21.1%)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2011년부터 3년간 동결
  -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각각 2011년 2.9%, 2012년 2.5%로 제한 등
- 세입확충 : 2012년 재정수입은 2,888억 유로로 2011년 수정전망 대비 4.8% 증가
  - 2012년 및 2013년에 대해 소득세, 부유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구간 동결
  -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9%→24%로 인상
  - 고소득자에 대해 한시적<sup>18)</sup>으로 소득세 3%p 인상 (2010년 40%→ 2011년 41%→ 2012년 44%로 인상)

<표 IV-6> 중앙정부 2012 예산안

(단위: 10억유로)

	2010년 확정치	2011년 2차 추경예산	2011 수정전망	2012년 예산안
재정지출	422.6	361.4	361.9	366.0
재정수입	254.7	268.8	275.6	288.8

자료: LF 2012

17) 2012년 인플레이션 상승률 전망: 1.7%

18) 재정적자 목표치인 GDP의 3% 달성시까지 운영되며, 현재 동 재정적자 목표 달성시기는 2013년

### 3. 예산안 내용 (LF 2012)

- 9.28일 재정적자 감축에 초점을 맞춘 2012회계연도('12.1월~'12.12월) 예산안이 발표되었고 12.28일 의회 통과됨

#### 가. 세입

- 2012년 조세수입은 2,888억유로로, 부유층에 대한 세수확대 및 세제혜택 축소 등에 초점을 두어 2011년 대비 4.8% 증가
  - 2012년 예산법안에서 추진된 세제개편 정책으로 174억유로 증가('12년부터 추진)

<표 IV-7> 세제개편 현황

	주요내용	비고
세율인상	연간 50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한시적 <sup>19)</sup> 으로 소득세 3%p 인상	41%→44%
	담배, 주류, 청량음료, 테마파크 티켓 등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	
	보충 의료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2012~2013년까지 연매출 2.5억 유로 이상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5%p 한시적 인상	34.4%→39.4%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상향 조정	19%→24%
세제혜택 축소	1박 숙박비가 200유로 이상인 숙박시설에 대해 호텔 숙박세 도입	숙박료의 2%징수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 제도의 혜택 축소	

19) 재정적자 목표치인 GDP의 3% 달성시까지 운영되며, 현재 동 재정적자 목표 달성시기는 2013년

<표 IV-8> 2011-2012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10억 유로)

미션	2011 본(수정)예산 (A)	2012 예산법안 (B)	B-A (%)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83	2.93	0.1 (3.5)
일반공공행정 (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2.07	2.74	0.67 (32.4)
농업, 임업, 수산업 (Agriculture, pêch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53	3.77	0.24 (6.8)
공공보조 - 저소득층 지원, 외국인 이민자 지원 감소 (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4.55	2.75	△1.8 (△39.6)
퇴역군인 지원 (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3.28	3.19	△0.09 (△2.7)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 (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50	0.60	0.1 (20.0)
문화(Culture)	2.53	2.60	0.07 (2.8)
국방(Défense)	34.72	40.24	5.52 (15.9)
국가정책방향 - 정책통합, 자유 및 권리보호, EU내 프랑스 지위 확보 (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47	1.10	△0.37 (△25.2)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Ecologie, développement et aménagement durables)	9.10	9.81	0.71 (7.8)
경제 - 산업 및 기업 지원(Economie)	1.83	2.00	0.17 (9.3)
국가의 재정 의무	48.12	49.92	1.8 (3.7)
교육(Enseignement scolaire)	45.65	62.34	16.69 (36.6)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9.27	11.64	2.37 (25.6)
이민 및 통합정책 (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0.56	0.63	0.07 (12.5)
법무부 (Justice)	7.66	9.80	2.14 (27.9)
언론 (Médias)	1.45	1.27	△0.18 (△12.4)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 (Outre-mer)	2.12	2.18	0.06 (2.8)
균형발전정책 (Politique des territoires)	0.35	0.33	△0.02 (△5.7)

(단위: 10억 유로)

미션	2011 분(수정)예산 (A)	2012 예산법안 (B)	B-A (%)
R&D 및 고등교육 (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4.79	25.79	1 (4.0)
복지 및 은퇴자 지원 (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03	6.62	0.59 (9.8)
지방재정지원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55	2.54	△0.01 (△0.4)
환급과 리베이트 (Remboursements et dégrèvements)	55.10	22.44	△32.66 (△59.3)
건강 복지 (Santé)	1.22	1.38	0.16 (13.1)
치안 (Sécurité)	11.52	17.17	5.65 (49.0)
시민안정 - 자연재해 및 화재등 (Sécurité civile)	0.42	0.42	0 (0.0)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2.17	12.79	0.62 (5.1)
체육 및 건강, 청소년 지원 (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0.42	0.48	0.06 (14.3)
노동 및 고용 (Travail et emploi)	12.19	10.16	△2.03 (△16.7)
건설 및 주택 (Ville et logement)	7.67	7.85	0.18 (2.3)
정부재정관리 - 부채 관리, 국채발행등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45.38	48.77	3.39 (7.5)
예비비 (Provisions)	0.34	-	-
경제위기대응정책 (Plan de relance de l'économie)	-	-	-
의회, 헌법위원회 등 (Pouvoirs publics)	0.49	0.59	0.1 (20.0)
합계	361.9	366.0	4.1 (1.1)

자료: LF 2012

## 나. 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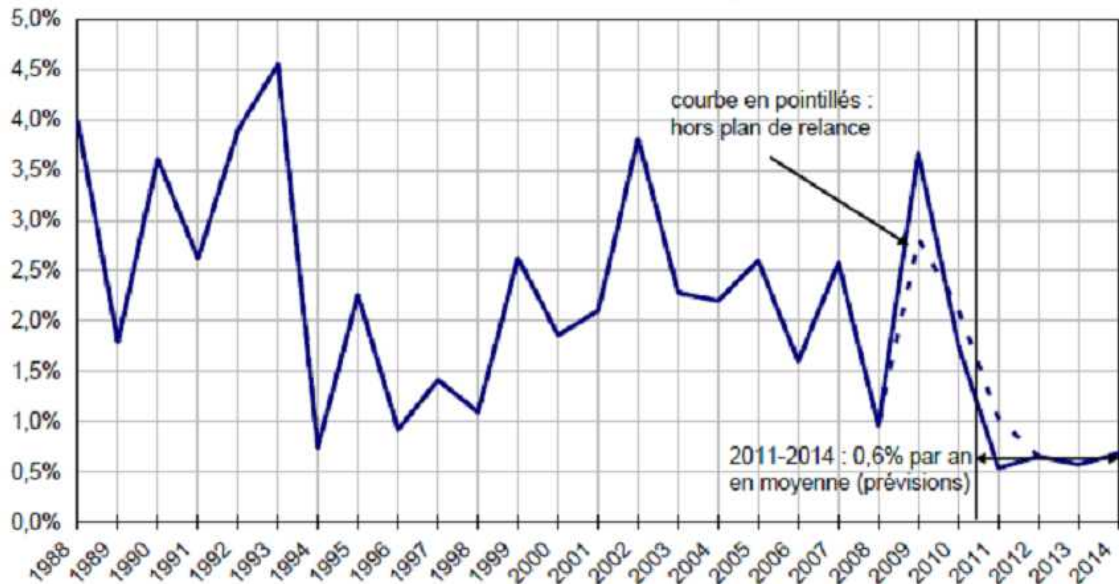
- 재정적자 감소를 주요 목표로 지출을 통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공공보조 분야에서 가장 크게 감액된 반면, 교육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증액됨
    - 공공보조 분야는 저소득층·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지원 축소로 전년대비 65.5% 감소 (△18억유로)
    - 교육 분야에서는 사회(고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 특히 취약분야인 농업 기술 교육 분야에 12만 2천명 지원으로 전년대비 36.6%증가 (167억유로)
  - 분야별 지출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
    - 농업. 임업. 수산업: 2011년부터 시작된 농업 근대화 투자 정책을 통해 경쟁력 확보 초점 (2억4천유로)
    - 국방: 항공 우주 연구 및 연구를 위한 국립 연구 시설, 항공 우주 박물관, 해군 및 육군 박물관 설립으로 전년대비 15.9% 증가 (55억유로)
    - 법무부: 청소년 사법제도 개혁(미성년자 보호 강화) 및 교도소 환경 개선, 청소년의 경우 출소 후 고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으로 전년대비 27.9% 증가 (21억유로)
    - R&D 및 고등교육: R&D 및 고등교육 예산은 5년간 40%가 증가, 증가 원인은 에이즈와 바이러스성 간염 관련 국가연구기구(ANRS) 지원 및 국립학교와 국립연구소간의 통합화 과정 지원으로 전년대비 4.0% 증가(10억유로)
    - 은퇴자 지원: 새로 진입한 은퇴자를 위한 연금 증가 (6억유로)
    - 치안: 국가 보안을 위한 경찰 및 헌병 강화 및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으로 49.0% 증가 (57억유로)

## 4. 주요 재정정책

### 가. 재정건전화

- 프랑스 예산안은 '11년과 마찬가지로 지출통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12년도 예산에서는 제로증가율 원칙\*에 따라 지방 정부·EU 보조금을 거의 동결하는 등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
    - \* 연금 및 채무상환비용을 제외한 정부지출 증가율을 0으로 제한
  - 총 174억 유로 규모의 이번 긴축방안은,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대해 각각 10억 유로와 174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
    - 2011년 하반기 추가세입으로 10억 유로, 2012년 세입확대와 지출축소 방안으로 174억유로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 ('11.11.7)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2011년부터 3년간 동결
    - 의료보험비 지출 증가율\*을 2011년 2.9%, 2012년 2.5%로 제한
      -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5%로 동결
    - 은퇴연령 상향조정 조기시행('18→'17년)

[그림 IV-1] 재정지출 추이



자료: LPFP 2011-2014

- 174억유로에 달하는 세제지원 철폐 및 조세감면 축소 정책을 2012년부터 본격 실행
  - 중소기업 관련 소득 및 투자에 대한 감세제도 개혁 (제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 현 소득세의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10% 감세와 세금공제
  -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 제도의 혜택 축소
  
- IMF는 프랑스 재정적자가 2012년 GDP 대비 4.5%로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감축 속도가 둔화돼 2013년에는 3.9%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IMF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소세와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가 2012년 GDP 대비 4.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IMF와 견해를 같이했으나 2013년에는 유로존 합의기준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2011년 12월 26일)

## 나. 복지지출 관리 정책

### □ 복지 관련 지출과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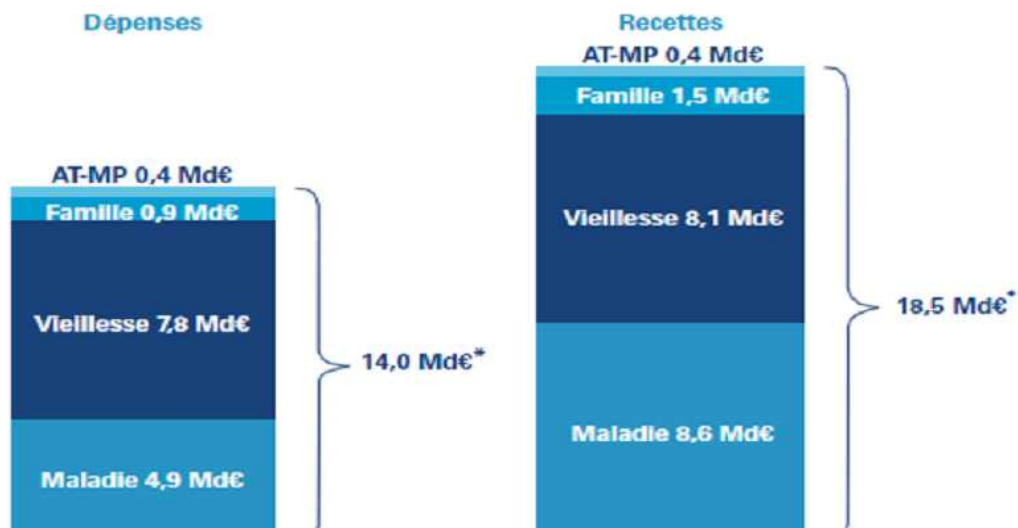
- [그림 IV-2]를 보면 2011년과 2012년 사이 복지관련 지출은 140억유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이보다 32% 많은 185억유로 증가

<표 IV-9> 복지 관련 지출과 수입

분야	재정 지출	재정 수입
노령관련 (vieillesse)	78억유로 증가	81억유로 증가
의료관련 (maladie)	49억유로 증가	86억유로 증가
산재보험 (AT-MP) 관련	4억유로 증가	4억유로 증가
가족관련 (Famille)	9억유로 증가	15억유로 증가

자료: LFSS 2012 (2011.12.28)

[그림 IV-2] 2011-2012 복지 재정 지출과 수입 추이



자료: LFSS 2012 en chiffres

- 사회보장부문 예산 (2011년 9월 23일에 제출, 12월 28일에 채택)
  - 80억유로의 새로운 재원마련과 지출 통제를 통해 200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재정적자를 2012년 179억유로까지 감소할 것을 목표로 설정
  - 세입확대 및 세제혜택 축소와 사회보장 채무를 사회보장 감채기금(CADES: la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sup>20</sup>)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재원 마련

<표 IV-10> 201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

(단위: 10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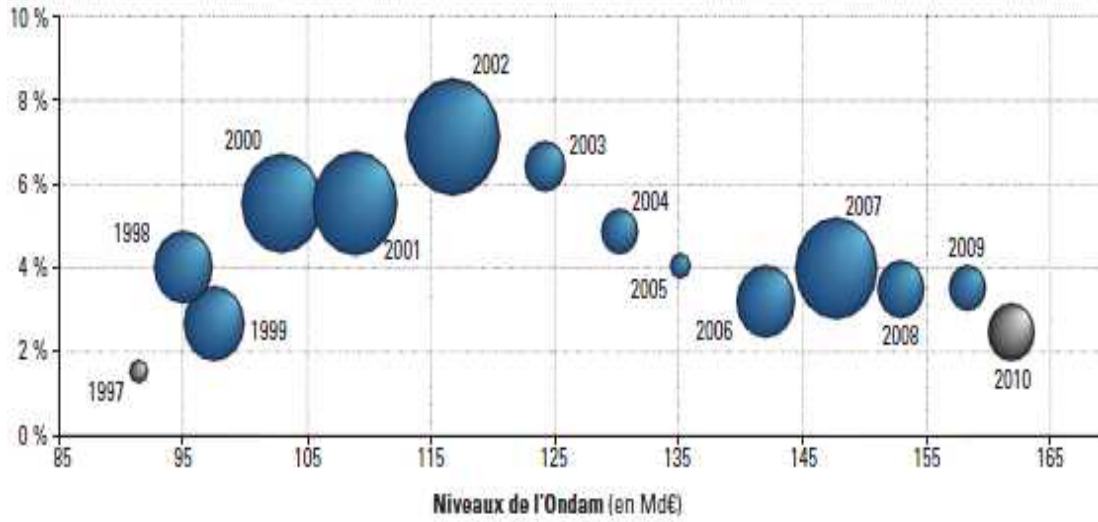
	2011 결산	2012 예산
의료보험 (CNAM)	-9.5	-5.9
산재보험 (CNAM AT/MP)	0.0	0.0
노후연대기금(FSV) <sup>1)</sup>	-3.8	-4.1
가족지원금(CNAF) <sup>2)</sup>	-2.6	-2.0
일반 제도 수지(Regime General) <sup>3)</sup>	-15.9	
법정연금기금 (CNAV)	-6.0	-5.9
총액	-21.9	-17.9

- 주: 1) 노후연대기금(FSV)은 보충성 급여로서 현재의 소득수준과 법정 최저생활수준의 차이만큼 지급 (임춘식 외 6인, 2005)
- 2) 가족지원금 (CNAF)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 및 보조금을 지급, 대부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수당이 대부분임
- 3)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제도, 특별제도, 자영업자 제도, 농업노동자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제도는 전체 피보험자의 7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중심적 제도임 (박찬영, 1997)

- 의료 관련 지출 통제 정책
  - 의료비 지출의 통제 강화(의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고가 진료환자의 보험료 반환)를 통해 2012년 의료비 지출 증가율 목표(ONDAM)를 2.5%로 전망

20) 프랑스 사회보장채무의 재정수지 회복을 위해 채무상환을 목표로 함.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가까운 구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을 제공하는 파산이 불가능한 공공기금

[그림 IV-3] 의료비 지출 증가율 목표 추이와 전망



자료: LFSS 2012

- 고령인구 관련 정책 강화
  - 장애인구와 고령인구를 위한 지출목표(ONDAM)는 2011년 대비 6.1%로 의료관련 지출 중 가장 큰 폭 인상 ('11년 76억유로 → 80억유로)
- 각종 보조금 및 사회보장수당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통제 강화